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민주 전북 기초단체장 후보 선출 윤곽

전주 등 13곳 후보자 확정
 임실군수 후보는 중앙당
 윤리감찰 결과 따라 결정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윤준병)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후보 선출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다만 임실군수 후보는 중앙당 윤리감찰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될 예정으로, 최종 후보 구성은 일부 남겨둔 상태다.

민주당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영자)는 2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결선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8개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 14개 시·군 가운데 13곳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결정됐다.

이번 결선투표 결과 전주시장 후보에는 조지훈, 군산시장 김재준, 익산시시장 최정호, 정읍시장 이학수 후보가 각각 공천을 받았다. 이어 남원시장 양종모, 완주군수 유희태, 진안군수 전준성, 부안군수 권익현 후보도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앞서 본경선에서 김제시,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고창군 등 5개 지역은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서 일제감치 후보가 확정됐으며, 과반 득표자가 없었던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상위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실시됐다.

결선투표는 관리당원 선거인단 50%와 일반시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투표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이어졌으며, 첫날에는 관리당원과 일반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전화ARS 투표가 실시됐고, 둘째 날에는 관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추가ARS 투표가 진행됐다. 이는 당원 의사와 일반 시민 여론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도입됐다.

다만 선관위는 당규에 따라 후보자별 득표율과 투표율 등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선출된 후보자만 발표하고, 세부 결과는 각 후보 측 참관인을 통해 개별 통보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이는 경선 이후 과열된 경쟁 구도를 완화하고 당내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선관위 박영자 위원장은 이번 경선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과



박영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장이 2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북 기초단체장 결선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민주 전북 기초단체장 후보자

 〈전주시장〉 조지훈	 〈군산시장〉 김재준	 〈익산시장〉 최정호	 〈정읍시장〉 이학수	 〈남원시장〉 양종모	 〈김제시장〉 정성주	 〈완주군수〉 유희태
 〈진안군수〉 전준성	 〈무주군수〉 황인홍	 〈장수군수〉 최선식	 〈순창군수〉 최영일	 〈고창군수〉 심덕섭	 〈부안군수〉 권익현	※임실군수 후보 추후 결정

열 경쟁과 같은 양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후보에 대해서는 주의 및 경고 조치가 내려졌으며, 향후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영자 위원장은 "당 규정을 성실히 지킨 후보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경선에서는 제재가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당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득표율 비공개 방침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선관위는 중앙당 방침에 따른 결정이라며 "비공개 방식이 오

려 유권자의 보다 자유롭고 순수한 선택을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투명성 저하와 함께 허위사실 유포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허위사실 유포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선거 이후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심 신청이 제기될 경우 일정상 추가 검토가 불가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한편 임실군수 후보 선출은 중앙당 윤리감찰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

으로, 현재까지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구성이 완전히 확정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이번 공천 결과로 더불어민주당은 전북 대부분 지역에서 본선 체제를 갖추게 됐다. 확정된 후보들은 향후 공약 발표와 조직 정비에 나서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경선 결과가 향후 본선 경쟁 구도와 전북 정치 지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 미래형 모빌리티 전동화·지능화 '핵심'

도, 상용차 모빌리티 전동화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나서
 전기 상용차용 멀티·배터리시스템 평가시험 구축 추진
 로봇·자동화 기술 접목 '스마트 특장차' 개발도 병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상용차 중심 산업 구조를 미래형 모빌리티로 전환하기 위해 전동화와 지능화를 핵심 축으로 한 산업 대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조성부터 배터리 평가 인프라 구축, 스마트 특장차 기술개발까지 전방위 전략을 통해 첨단 산업 거점 도약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전북도는 상용차 전동화 대응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상용차 모빌리티 전동화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나섰다.

해당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5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완주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반경 40km 이내 산업단지를 연계해 전장부품 기반 구축, 연구개발(R&D), 기업 지원, 인력 양성을 통한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북은 완주·군산의 완성차 생산, 김제 특장차 산업, 전주·익산의 부품 산업, 새만금의 실증·수출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국내 최대 상용차 생산 거점으로 꼽힌다. 실제로 전국 상용차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전기차와 수소차로의 전환은 배터리 용량 한계와 충전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로 더딘 상황이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북도는 전동화 기술 확보와 부품 산업

구조 개편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부품기업의 로봇·전동화 부품 기업 전환을 유도해 산업 체질 개선을 꾀하고 있으며,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한 컨소시엄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동화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전기 상용차용 멀티·배터리시스템 성능·안전성 평가시험센터' 구축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군산 새만금국가산업단지 들어서는 이 센터는 전기상용차에 적용되는 다중 배터리 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국내 최초 시설로, 총 218억원이 투입된다.

전기상용차는 고출력·장거리 운행 특성상 복수의 배터리를 동시에 사용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고도의 안전성과 성능 검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이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해당 센터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센터가 구축되면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시험평가 서비스와 기술개발 지원이 이뤄져 제품 품질 향상과 사업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약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2면에 계속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도의회 통과

기본소득 종합계획 수립·시행 등 정책 추진 기본 틀 규정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이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는 도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 및 기본권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의 기본 틀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소득 종합계획 수립·

시행 △종합계획 수립 및 기본소득 교육·홍보를 위한 실태조사 △기본소득 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는 기본소득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으며, 향후 도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논의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의 미래, 군산의 새로운 도약!

소통하고 공감하며, 행동하는 의회

군산시의회가 함께 합니다